

국가 작성 6·25 납북자 8만 명 명부 발견!

## 6. 25 납북자 8만 명 명부 발견 과정 기록

- 1950년 12월에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拉致, 被殺, 行方不明 구분 被拉致者 名簿 발견
- 1952년경에 정부가 만든 「6·25 事變 被拉致者 名簿」는 통계청 전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데도 통일부는 존재 자체를 모른 채 「통계는 있고 명단이 없는 상태다」고 말하고 있다.
- 6·25 拉北者 가족들은 전쟁 피해자이면서도 연좌제 등으로 한 많은 세월 보내
- 정부, 「납북자 가족들 스스로 대한적십자사에 신고한 명단 외에 국가 작성의 공식 납북자 명단은 없다」는 입장
- 기자는 전화만으로 하루 만에 정부 관련 기관에 大韓民國 政府 이름으로 작성된 6·25 事變 被拉致者 名簿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지난해 4월 拉北者 문제 전담 부서까지 설치한 정부는 拉北者 名簿를 안 찾나 못 찾나
- 북한은 拉北者의 존재 자체를 否認



〈일간신 2012. 3〉

12/12

李承晚政府는 6·25 被拉致者 名簿를 작성… 남북자 문제 담당 現 통일부는 이런 문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金成東 月刊朝鮮 기자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피해자 명단 4616명 수록

李承晚 정부가 6·25 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문서로 남겼으나 남북가족 문제를 다루는 주무 부서인 통일부는 그런 문서들이 작성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6·25 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들이 발견됐다. 李承晚 정부의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서울特別市 被害者名簿」과 작성처를 대한민국 정부라고 밝힌 「6·25 事變 被拉致者 名簿」 가 그것이다.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서울特別市 被害者 名簿」는 표지 하단에 「공보처 통계국」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문서 표지 상단에는 「檀紀 4283年 自6月25일 至9月28日 (6·25 事變中)」이라고 적어, 조사 대상이 된 피해 발생기간을 밝히고 있다. 6·25 6·25 전쟁 발발 직후부터 9·28 서울 수복까지의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명단을 조사한 것이다. 발행일이 檀紀(단기) 4283년(1950년) 12월1일로 되어 있는 被害者 名簿(피해자 명부)는

중구, 종로구 등 서울시내 9개 區廳(구청)별로 조사한 명단을 담당 공무원이 漢字로 일일이 적어 謄寫(등사)한 것이다.

당국은 지금까지 6·25 拉北者들의 경우 拉致(납치)를 당한 것인지, 자진 越北(월북)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이 문서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인사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다.

피해조사 항목은 姓名(성명), 性別(성별), 年齡(연령), 職業(직업), 所屬(소속) 및 職位(직위), 被害(피해) 月日, 被害種類(피해종류), 被害場所(피해장소), 略歷(약력), 住所(주소) 등 10개 분야다. 拉北者를 구분해 주는 것은 10개 분야 가운데 被害種類 항목이다. 拉致, 被殺(피살), 行方不明(행방불명)으로 피해상황을 구별해 놓았다.

被害人 名簿에는 소설가 李光洙(이광수), 玄相允(현상윤) 고려大 총장, 孫晉泰(손진태) 서울문리대 학장, 국회의원 安在鴻(안재홍) · 趙素昂(조소昂) 등 당시의 유명 拉北인사들과 함께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교사, 상업, 학생,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拉北인사들이 기재돼 있다.

소설가 李光洙의 경우 항목별로 「男 · 59 · 著述家 · 興士團理事 · 7 월12일 · 拉致 · 自宅 · (略歷란은 공란) · 孝子洞 3統7班」 으로 돼 있고, 玄相允 고려大 총장의 경우는 「男 · 58 · 教授 · 高大總長 · 7월26일 · 拉致 · 仁寺洞 樂園市場 앞 · (略歷란은 공란) · 嘉會洞 1統3班」 으로 기재돼 있다.

피살자 가운데 金寬泳씨의 경우는 「男 · 37 · 辯護士 · 前 南勞黨員 · 9월24일 · 被殺 · 自宅 · 檢事 二年 辯護士 三年 · 城北洞 3統5班」 으로 기재돼 있다.

문서에 기록된 피해자 총수는 4616명이다. 이 가운데 납치가 가장 많은 2438명이다. 납치를 당한 사람 가운데 여성은 93명이다. 행방불명자는 1202명, 피살자가 976명이다. 구청별로는 중구(892명), 종로구(769명), 용산구(579명)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다.

공보처 통계국은 피해자 명부 凡例(범례)를 통해 다섯 가지 문서 작성 사유와 작성 방법을 적고 있다. 凡例는 이 名簿가 애초에는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피해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음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 조사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했고, 의용군으로 입대한 사람은 제외했다는 점도 적고 있다.

편집의 특징은 범례 다섯 번째 항목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각 區별로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명단 계재 순서를 姓氏 順으로 했다는 점이다. 피해자 중 金氏 姓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金씨부터, 李氏 姓이 많으면 李씨부터 명단을 계재하는 식이다. 해당 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性別 색인표도 만들어 놓았다.

피해자 명부는 명단 외에도 부록으로 1950년 10월 25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임시인구 및 피해조사 결과 명세」를 실고 있다. 사망자 부상자 등 원인별 피해자 수와 주택 피해, 사업체 피해, 폭격·화재 등으로 인한 인구의 이동, 내무부·외무부·재무부 등 공공기관의 피해 상황 등을 각 기관별로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이 명부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李美一·이미일)가 최근 古書수집가로부터 입수해 소장하고 있다.

「6·25 事變 被拉致者 名簿」 납북자 8만661명 밝혀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또 다른 문서는 보다 방대하다.

문서 표지 하단에 大韓民國 政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6·25事變 被拉致者 名簿」는 李承晚 정부가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납북자 명단을 작성했음을 보여 주는 문서다.

月刊朝鮮이 확인한 이 문서에는 서울特別市 납북자들의 명단(1만 8330명)만 실려 있지만 이 문서 앞부분에 있는 總括表(총괄표)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충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의 납북자 숫자가 기록돼 있다. 서울 지역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납북자 명단이 작성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문서가 밝히고 있는 전국의 납북자 명단은 8만661명이다. 남자가 7만9145명, 여자가 151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83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1만5871명), 강원도(1만422명), 충청남도(9972명), 경상북도(7483명), 전라북도(7013명), 충청북도(6166명), 전라남도(3554명), 경상남도(1805명), 제주도(45명) 順이다.

납북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 이북 지역에 집중돼 있다. 전지역에서 납치된 남성의 숫자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가장 적은 인원이 납치된 제주지역만은 반대다. 총 45명의 피랍자 가운데 여자가 30명으로 남자 15명의 두 배다.

인민군 점령지역이 아니었던 제주도에서도 납북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주소지를 근거로 납치자 명부가 작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항목은 姓名, 性別, 年齡, 職業, 所屬 및 職位, 拉致年月日, 拉致場所, 住所 등으로 8개 항목이다. 1950년 12월에 작성된 「서울시 被害者 名簿」보다 두 개 항목이 줄었다. 略歷란과 被害種類란이 없어졌지만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됐음을 알 수 있다.

拉致, 被殺, 行方不明 등이 실렸던 被害種類란이 사라진 대신 被害月日을 기재하던 난이 拉致年月日로 바뀌었다. 문서의 제목대로 피살자나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남북자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피해종류란은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6·25 事變 被拉者 名簿」가 작성된 시기는 1952년 10월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1952년 10월에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이 발간한 「大韓民國統計年鑑」에는 6·25 사변 중 피랍자를 8만2959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1953년 발행한 「大韓民國統計年鑑」에는 남북자 수를 8만 453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통계연감은 휴전 이후에 발간된 것이다. 피랍자 명부의 남북자 수가 1952년 발행 통계연감에 기록된 숫자에 비교적 근접해 있고 휴전 이후에 발행된 통계연감의 남북자 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952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인 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6·25 사변 남북자 수는 8만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6·25 事變 被拉者名簿」는 현재 통계청 대전 청사내 「통계전시관」에 복사본이 전시돼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돼 있음이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발견된 名簿는 공신력 있는 문건』

이번에 발견(확인)된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납치해 간 인사들의 명단은 향후 남북자의 생사 확인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남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는 6·25 남북자 송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宋榮大(송영대) 前 통일원 차관은 「발견된 문건의 작성 주체가 정부라면 공신력 있는 문건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런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남북자 송환을 요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번 남북자 명단 발견을 계기로 송환 요구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이슈화한 후 남북한 고위층의 협상을 통해 남북자 송환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국제 인권단체 등과 연대해 한반도 남북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함으로써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전 이후 남북된 남북어부 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돋고 있는 全承萬(전승만) 변호사도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명단을 근거로 북한에 대해 6·25 남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과거 서독이 돈을 주고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온 것처럼 정부도 남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全변호사의 말대로 남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세울 의지가 있는가.

정부는 2001년 4월 남북자 문제 등을 전담하는 통일부에 이산가족 1과와 2과를 신설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남북자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남북자 명부 등 송환 요구에 기초자료가 될 자료 수집에는 미온적이다.

주무 부서인 통일부에서는 같은 정부기관과 정부 관련 기관 내에 6·25 사변 피랍치자 명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기자는 이승만 정부가 만든 6·25 피랍자 명단冊 2권을 확인한 다음 통일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부는 6·25 남북자 명단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失鄉私民(실향사민) 명단 외에는』

—1956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남북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작성한 失鄉私民 명단 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주무 부서로서 행자부 등 다른 정부 기관에는 남북자 명단이 작성된 문건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했고 6·25 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지만 통계자료만 있고 실사자료가 없으니까 행자부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다면) 50년 전 戰時(전시)의 자료인데… 그 당시에는 자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6·25 남북자 가족들은 1952년도에 정부에서 남북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拉北, 被殺, 行方不明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조사해서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던데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사망이 몇 명, 피랍이 몇 명, 실종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에서 들어오는 이런 걸 통합해서 냈지 누가 남북자다, 누가 사망했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통계로는 되어 있어도 일일이 개인별로 피해를 조사해 작성한 명단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失鄉私民」명단은 정부 조사 아닌 가족들 신고 받아 작성한 것

통일부 관계자가 6·25 전쟁 중 남북자 관련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는 「失鄉私民」명단이란 정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간 남북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아 작성한 명단이다. 「안부탐지 조회서」라는 제목의 신고서를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남북자 가족은 7034명이다. 이 가운데 여자는 150명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휴전선 以南이 85%를 차지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남북자가 전체 피랍자의 절반을 넘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13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업(1005명), 상업(966명), 회사원(737명), 학생(677명), 교육자(355명), 기술자(330명) 순이었다. 정치인과 언론인도 각각 85명, 75명씩이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이유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남북자 송환 노력의 일환이었다. 남북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대한적십자사는 1956년 10월 국제적십자사에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7034명의 명단을 보냈고, 국제적십자사는 이 명단을 북한 측에 통보했다. 북한적십자회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월남인사 1만4132명에 대한 행방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1957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북한적십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생사확인을 요청한 拉北人士 7034명 중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보내왔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2001년 1월에도 민주당 金成鎬(김성호) 의원이 7034명의 남북자 명단과 함께 생존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北에 유리한 「失鄉私民」이란 말을 대한민국 공무원이 쓰다니 문제는 失鄉私民이라는 용어다.

失鄉私民(Displaced Civilians)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때는 1952년 1월 8일 휴전회담 제66차 회의에서 유엔군 측에서 포로교환을

제의하면서부터다. 이전에 열린 휴전회담에서 북한 측이 「우리가 拉致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자 피랍자(Kidnapped Persons)란 용어를 피해 失鄉私民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협상 전술상 택한 표현이다.

대한적십자사가 1976년 9월에 펴낸 「이산가족 백서」 163쪽에서는 유엔군 측이 피랍자를 失鄉私民이라고 규정한 것은 중대한 過誤(과오)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軍側이 被拉者를 失鄉私民이라고 규정한 것도 重大 過誤의 하나였다. 결국 실향사민이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지 강제연행된 피랍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측의 주장인 자진월북자만 있을 뿐 타의에 의한 실향사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구를 객관화했기 때문이다. 실향사민이란 용어는 공산군 측에게 오히려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死線을 넘어 自進 越南해 온 수백만 피란민을 北으로 송환하라고 정치공세를 펴는 구실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가진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는 「失鄉私民 명단」이라는 말보다 「적십자에서 작성한 납북자 명단」 또는 「적십자 작성 납북자 신고서」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기자가 전화로 하루 만에 다른 정부기관에서 찾아낸 명부를 통일부는 없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內에 납북자 명단이 없다고 했지만 기자는 앞에서 소개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를 전화로 하루 만에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도 다른 정부기관 안에서. 결국 통일부는 자료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被害者 名簿」를 입수한 기자는 2002년 1월2일 오전 문서 작성처가 공보처 통계국이었던 점에 착안, 공보처와 공보처 통계국 후신인 통계청에 6·25 전쟁 납치자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전화로 확인을 요청했다.

통계청 통계정보국자료관리과의 관계자는 잠시 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 검색 결과 통계청 전시관에 「6·25 피랍(拉字를 립字로 잘못 읽은 誤字였고,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사를 해온 문건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기자는 그 관계자에게 전시관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날 오후 그 관계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그 관계자는 「확인 결과 립은 랍의 誤字였고, 규장각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사를 해온 문건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곧바로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확인한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에 「6·25 事變 被拉致者 名簿」가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1996년에 하버드大 엔칭(YENCHING)도서관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影印(영인)해 온 문서」라고 밝혔다. 528쪽으로 이루어진 그 문서에는 6·25 사변 납북자가 8만661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던 1만8330명의 납북자 명단이 실려 있었다.

통일부가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던 납북자 명단이 하루 만에 발견된 것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납북자 명단도 확보 안 해  
정부 당국의 6·25 납북자들에 대한 무성의는 이미 공개된 납북자 명단조차 확보해놓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1989년 10월5일, 韓國藏書家協會(한국장서가협회) 辛永吉(신영길) 회장은 개인소장 자료 하나를 공개했다. 辛회장이 공개한 개인소장자료는 「六·二五事變 被拉致人士 名簿」였다. 이 名簿에 게재된 납북인사는 총 2316명이다. 「서울 특별시 被害者 名簿」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玄相允 고려大 총장, 孫晉泰 서울大 문리대학장, 국회의원 安在鴻 등 당시 유명 납북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역시 筆寫(필사) 등사본인 110쪽 분량의 이 名簿는 「6·25事變 被拉致者 名簿」, 「서울특별시 被害者 名簿」처럼 중구, 종로구, 마포구 등 구청별로 납북자 명단을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 항목은 姓名, 職場, 年齡, 住所, 被害日月 등 다섯 개 항목으로 간략하다.

다른 名簿들이 서울지역 납북자들만 수록한 것과 달리 수원·양주·광주 등의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납북자 명단도 市外 지역으로 둘어 게재 했다. 간략하게나마 서울 외의 지역 납북자들의 명단이 실린 것은 이 문서가 정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 6·25 전쟁 직후부터 활동하던 「6·25 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작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1950년대 중반까지 납북가족의 송환을 촉구하는 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生業 전념 등의 이유로 활동을 멈췄다. 문서 좌측 하단부에는 세로로 「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家族會」라는 단체명과 함께 단체의 직인이 찍혀 있다. 우측 상단부에는 세로로 「國會議長 申翼熙 開下」라는 글귀가 찍혀 있어 작성 시기는 申翼熙(신익희) 선생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한 기간인 1950년 6월부터 1954년 5월30일 사이로 추측된다.

이 문건은 辛회장이 1979년 서울 청계천 고서점에서 발견했다. 辛회장의 처삼촌인 金準朴(김준평) 前 서울변호사회장이 6·25 당시 납북

됐기 때문에 고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납북자 名簿를 보게 돼 당시 5000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한다.

辛회장이 공개한 「六·二五事變 被拉致人士 名簿」는 조선일보가 1989년 10월6일자로 특종 보도했고, 「통일한국」 1989년 12월호에는 명부에 수록된 2316명의 명단까지 공개됐다. 이 명부는 지금까지도 辛회장이 소장하고 있다. 辛회장은 「근래에 정부 기관에서 이 문서의 존재를 문의해온 적은 없었다』면서 「문서가 공개됐던 1989년에는 정보 기관에서 이 문서를 복사해 갔다』고 말했다.

辛회장은 「문서가 공개된 후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부모님의 납치일을 묻는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 「문의를 한 대부분의 가족들은 부모님이 납치당한 날을 제삿날로 정하기 위해서였다』고 기억했다.

정부는 언론에 공개됐고 많은 납북자 가족들이 그 문서를 근거로 제삿날을 정하기도 했던 납북인사 명단조차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사라진 8만여 명의 납북자들

2000년 11월30일에 창립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 관련기관에 납북자 명단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납북자 명단 확보 노력을 해왔다. 이 단체의 납북자 명단 보관 확인 요구에 대한 행자부,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 관련기관들의 답은 「그런 자료는 없다」였다.

정부는 6·25 전쟁중 납북자 명단을 안 찾는 것인가, 못 찾는 것인가.

辛회장은 「六·二五事變 被拉致者 名簿」를 공개한 직후 정보기관에서 명단을 복사해갔다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의 李美一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안 찾는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안에서 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성된 납북자 명단이 있다고 확신한다. 실질적으로 연좌제가 폐지된 1980년대 중반까지 담당 경찰이 바뀌어도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가 계속 이어진 것은 납북자 명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서울시에 국한된 명단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피랍자 명단도 그 방증이다.』

6·25 납북자 명단을 정부가 안 찾는 것인가, 못 찾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의 납북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6·25전쟁중 납북자이고, 다른 하나는 휴전 이후 납북자들이다. 金大中 정부가 말하는 납북자란 납북 어부 등 休戰 이후의 납북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2000년 9월3일 방송의 날 열린 방송 3社 공동 초청 특별대담에서 납북자와 관련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그대로 옮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군포로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려나면 1953년 휴전 때 포로교환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이고 납북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와 모든 것을 해서 판단하고 파악한 바로는 국군포로가 한 300~400명 파악되고 있고 또 납북자도 그 정도 수, 그래서 전부 합해 700~800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휴전 이후의 납북자 수는 3790여 명이다. 이 가운데 480여 명이 아직 북한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金大中 대통령조차 6·25 전

쟁중 납북자 8만여 명에 대해서는 납북자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北이 싫어해서 (납북자) 얘기 못 한다.』

정책 담당자의 6·25전쟁중 납북자를 보는 시각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2000년 11월29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벌어진 한나라당 柳興洙(유홍수) 의원, 朴寬用 의원과 통일부 洪良浩(홍양호) 인도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柳興洙: 지금 설명에 의하면 전쟁중에 납북된 사람은 그러면 이산가족이나 이런 데에도 전혀 대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교환할 사람이나 앞으로 들어올 사람에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洪良浩: 그 분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시에 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추첨이 되면 교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柳興洙: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납북자라는 것은 전쟁중에 납북된 사람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오?

洪良浩: 예. 전쟁 이후의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통계를 잡아 왔습니다.  
(中略)

洪良浩: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이산가족 차원에서 우선 해결하는 것이….

（中略）

朴寬用: 이산가족하고 왜 혼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北이 싫어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北의 기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北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야기 못 한다는 그런 이

야기지요)

이런 6·25 전쟁중 남북자를 바라보는 당국의 시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기자와 남북자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 이산가족 1과 강기찬 사무관과의問答(문답).

—6·25 당시 남치된 인사들을 廣義(광의)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인사 가족들은 6·25 남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북측에 송환을 요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25 남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6·25 남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없습니다. 휴전 협정 이후의 남북자 가운데 귀환 희망자는 모두 송환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제3국으로 이탈한 남북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귀환 시킨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에 포함해서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6·25 남북자들의 경우는 본인들 주장이나 1956년 적십자사에 신고한 失鄉私民 명단 외에는 뚜렷한 실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데 남북, 월북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인도적인 견지에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지 꼭 6·25 남북자라고 해서 포함시켜 하는 것은 아닙니다.』

大韓民國 정부는 왜 전쟁의 와중에도 남북자 명단을 작성했나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은 『정부나 언론이 남북자 문제를 다루면서 6·25 전쟁중 남북된 우리 부모나 친척들을 제외시키고

거론하는 데 분노해서 단체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들은 『6·25 전쟁시의 남북사건은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파괴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현재도 진행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6·25 전쟁 남북자 문제를 인권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北에 강제로 끌려간 부모나 형제들은 북한 공산치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했을 게 분명하고, 남한에 남은 가족들 역시 연좌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으므로 이 문제는 인권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남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송환 요구보다는 생사 확인이나 가족상봉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은 한계에 부딪쳤으므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宋前 차관의 말.

『전쟁중 남북자 문제는 전쟁 포로 문제와는 구분이 됩니다. 제네바 협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쟁 포로 문제와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인사들을 남북자라고 하지만 북한은 자진 월북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문제이면서 인도적 문제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만 접근을 해왔습니다. 정치적 문제이자 인도적 문제라는 양면이 있는데 인도적 차원에서만 접근을 했으니까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남북 頂上회담 같은 데서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金大中 정부는 失機(실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 이전에 남한 사회 자체적으로 6·25 남북

자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명지大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 지금 까지 전쟁중이나 휴전 이후 남북자에 대한 송환 요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면서 「국군포로 특별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남북자 특별법을 제정해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법의 제정이라는 상징을 통해서라도 가족을 북한에 빼앗기고도 우리 사회에서는 연좌제 등으로 고생한 남북자 가족들 의 아픔을 달래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든, 남북자 가족 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든, 그동안 없다던 대한 민국 정부 작성 6·25전쟁 남북자 명단은 발견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단순히 기록만 하기 위해 전쟁 와중에 남북자 명단을 작성했을 리는 만 무하다. 金大中 정부 역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부임 을 자임하고 있다.

李美一 6·25전쟁남북자기족협의회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휴전 후에도 남북 사건이 끊이지 않은 데에는 우리 정부가 전쟁중 남북자 문제를 북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면 남북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 장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에는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즉 남북자 명부까지 발견됐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북한의 대변자가 아닌 우리 국민의 대변자임을 믿고 싶습니다.』



## 6·25 전쟁 拉北者 명단 분석

- 「6·25 사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6·25사변 被拉致者 명부」(8만2959명), 「6·25 사변 피립인사 명부」(2316명), 「失鄉私民 등록자 명부」(7034명), 「被납치자 명부」(1만7940명)
- 지역별 : 서울 > 강원 > 충남 > 경기 > 충북 > 경북 > 전북 > 전남 > 경남 > 제주
- 직업별 : 농업 > 상업 > 노동자 > 학생 > 기술자 > 공무원 > 회사원 > 경찰
- 외국인 拉北者도 20명, 종교인이 6명



拉北者는 8만1731명, 수도권 지식인이 많아

金明浩 月刊朝鮮 기자

#### 6·25 남북자 7000~8만여 명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그 고통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모든 이산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한스러움과 슬픔을 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拉北者(남북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근래 對北 화해정책의 결과,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少數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拉北者 문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못해 왔다. 그러나 2002년 9월 제4차 南北 적십자회담에서 6·25 전쟁 때 「행방불명자」에 대한 生死·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拉北者들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拉北者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2년 10월31일~11월2일 열렸던 南北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은 「존재하지도 않는 拉北者 문제를 거론하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拉北者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拉北者 문제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리고 6·25 전쟁 때의 拉北者 수가

7000여 명에서 많게는 8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통계치가 서로 달라, 정확한 집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한적십자사는 6·25 전쟁 중 끌려간 拉北者는 7034명으로 이 가운데 337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停戰(정전)협정 체결 이후의 拉北者도 486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6·25 전쟁 拉北인사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6·25 전쟁 때 拉北된 인사는 대한적십자사 자료의 11배가 넘는 8만2959명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拉北者들의 人權문제는 그동안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

정부는 1953년 6·25 전쟁 동안 8만4532명이 拉北되었다고 발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56년 6월 중순부터 2개월간 「失鄉私民(실향사민)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7034명을 접수받았다. 대한적십자사가 집계한 7034명 중 80%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변에 집중되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1359명, 정치인 85명, 언론인 75명, 예술인 36명, 기업인 208명, 전문기술인 558명 등으로 절반 이상이 지식층이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이들의生死 확인을 요청했고, 북한적십자회는 1957년 이를 중 337명의 근황을 전해 왔다. 북한적십자회가 전달한 337명의 명단에는 국회의원 9명, 공무원 33명, 교원 23명, 의사 9명, 기자 3명 등이 있었다.

2000년 崔秉烈(최병렬) 의원은 국회에서 「6·25 전쟁 중 制憲의원 40명과 제2代 의원 27명(4명 중복)이 拉北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制憲국회의원 동지회는 제헌의원 53명이 6·25 전쟁 기간 중 拉北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공보처 통계국 작성 「6·25 서울시 피해자 명부」

현재까지 발견된 6·25 전쟁 拉北者 관련자료는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 사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6·25 사변 被拉致者 명부」(8만2959명), ▲海公 申翼熙(신익희) 선생 遺品(유품)에서 나온 「6·25 사변 피랍인사 명부」(2316명), ▲1956년 대한적십자사의 「失鄉私民 등록자 명부」(7034명),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한 「被납치자 명부」(1만7940명) 등 5개의 문서가 발견되었다.

「6·25 전쟁 拉北인사 가족협의회」가 古書 수집가에게서 입수한 「6·25 사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는 표지 하단에 「공보처 통계국」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한 문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문서 표지 상단에는 「檀紀(단기) 4283년 自6월25일 至9월28일(6·25 사변 중)」이라고 적어, 조사대상이 된 피해 발생 기간을 밝히고 있다.

발행일이 단기 4283년(1950년) 12월1일로 되어 있는 「6·25 사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는 종로구·중구 등 서울시내 9개 구청별로 조사한 명단을 담당 공무원이 漢字(한자)로 일일이 적어 謄寫(등사)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6·25 拉北者들의 경우 납치를 당한 것인지, 자진 越北(월북)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이 문서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인사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다.

피해조사 항목은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해일시, 피해종류, 피해장소, 약력, 주소로 10개 분야다. 拉北者를 구분해 주는 것은 10개 분야 가운데 피해종류 항목으로, 납치·피살·행방불명으로 피해상황을 구별해 놓았다.

### 「6·25 사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에는

玄相允(현상윤) 고려大 총장, 孫晉泰(손진태) 서울 大 문리대 학장, 소설가 李光洙(이광수), 국회의원 安在鴻(안재홍), 趙素昂(조소양) 등 당시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교사, 상업, 학생,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拉北인사들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에 기록된 피해자 총수는 4616명이며, 이 가운데 「납치」가 2438명이다. 납치를 당한 사람 가운데 여성은 93명이다. 행방불명자는 1202명, 피살자가 976명이다. 구청별로는 중구(892명), 종로구(769명), 용산구(579명)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다.

공보처 통계국은 피해자 名簿凡例를 통해 문서의 작성 사유와 작성 방법을 적고 있다. 凡例에는 이 문서가 애초에는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피해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음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 조사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했고, 의용군으로 입대한 사람은 제외했다는 점도 기록되어 있다.

### 「6·25 사변 被拉致者 명부」上 납북자는 8만2959명

「6·25 사변 被拉致者 명부」는 月刊朝鮮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2002년 2월 중순경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1952년 10월경 대한민국 정부의 조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8만2959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표 1〉 지역별 拉北者 수

(단위:명)

지역	남	여	공관	합계
서울시	22,833	498	1,137	24,468
강원도	10,739	22	65	10,826
경기도	9,009	60	62	9,131
경상남도	1,688	12	0	1,700
경상북도	7,030	102	1	7,133
전라남도	3,327	62	43	3,432
전라북도	6,493	413	10	6,916
충청남도	9,487	315	0	9,802
충청북도	8,265	11	1	8,277
제주도	17	29	0	46
합계	79,888	1,524	1,319	81,731

「전쟁 중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비롯하여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으므로, 그 당시 정부가 국가적 인명피해로 여기고 전국 일선 행정기관에 명령을 시달하여 실제로 납치여부를 확인한 후 명단을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명부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 전국의 拉北者 수가 기록돼 있다. 이 수는 1952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통계연감」과 거의 일치한다. 1953년에 발행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는 拉北者 수를 8만4532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1953년에 추가된 사람들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사항목은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로 8개 항목이다. 1950년 12월에 작성된 「6·25 사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보다 두 개 항목이 줄어 약력란과 피해종류란이 없어졌지만,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됐음을 알 수 있다.

「6·25 사변 피랍인사 명부」는 1952년 결성된 「6·25 사변 被납치인사 가족회」에서 작성하여 당시 申翼熙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 뒤 이 문서는 申翼熙 선생의 유물에서 발견되어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에 입수되었다. 문서에 수록된 被납치자는 대부분 서울 지역 거주자이며, 모두 2316명의 이름이 실려 있다.

「失鄉私民 등록자 명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拉北인사의 안부를 탐지해 주기 위해 拉北者 가족들로부터 1956년 6월15일부터 8월15일 까지 2개월에 걸쳐 失鄉私民 再등록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7034명의 이름이 실려 있다. 이때 「拉北者(拉北人事)」라는 말 대신에 「失鄉私民(Displaced Civilians)」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북한 측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拉北者들의 안부를 탐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표 2) 연령대별, 지역별 拉北者 수 (단위:명)

구분		1~10세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공관	합계
서울	남	15	2,736	9,525	5,735	2,660	1,345	372	74	362	
	여	1	107	214	71	47	30	7	3	18	
	공관	0	30	268	365	264	124	44	4	38	
	합계	16	2,873	10,007	6,171	2,971	1,499	423	81	427	24,468
강원도	남	1	2,443	5,986	1,809	285	131	25	1	67	
	여	0	7	9	0	3	1	0	1	0	
	공관	0	8	25	21	8	3	0	0	0	
	합계	1	2,450	6,020	1,830	296	135	25	2	67	10,826
경기도	남	0	1,510	4,800	1,766	548	246	59	23	57	
	여	0	10	23	14	4	4	1	1	3	
	공관	0	3	8	5	3	1	0	0	42	
	합계	0	1,523	4,831	1,785	555	251	60	24	102	9,131
경상남도	남	0	424	889	202	99	43	6	1	24	
	여	0	3	6	1	1	1	0	0	0	
	공관	0	0	0	0	0	0	0	0	0	
	합계	0	427	895	203	100	44	6	1	24	1,700
경상북도	남	0	1,993	4,198	553	140	45	22	4	75	
	여	1	39	49	5	2	2	1	0	3	
	공관	0	0	1	0	0	0	0	0	0	
	합계	1	2,032	4,248	558	142	47	23	4	78	7,133
전라북도	남	8	1,332	3,289	979	488	234	82	36	54	
	여	8	72	95	82	62	60	22	0	3	
	공관	1			1	4	3	1	0	0	
	합계	16	1,405	3,384	1,062	554	297	105	36	57	6,916
전라남도	남	3	967	1,889	228	81	40	12	3	104	
	여	4	20	19	10	4	2	1	0	2	
	공관	0	10	20	3	2	1	0	0	7	
	합계	7	997	1,928	241	87	43	13	3	113	3,432
충청남도	남	77	2,055	4,883	1,361	647	314	102	12	37	
	여	29	71	95	41	41	27	8	1	1	
	공관	0	0	0	0	0	0	0	0	0	
	합계	106	2,126	4,978	1,402	688	341	110	13	38	9,802
충청북도	남	1	2,182	5,263	712	40	15	4	2	47	
	여	0	9	2	0	0	0	0	0	0	
	공관	0	0	0	0	0	0	0	0	0	
	합계	1	2,191	5,265	712	40	15	4	2	47	8,277
제주도	남	0	10	5	1	1	0	0	0	0	
	여	0	19	9	1	0	0	0	0	0	
	공관	0	0	0	0	0	0	0	0	0	
	합계	0	29	14	2	1	0	0	0	0	46

주) 공관에 기재한 값은 특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데이터의 수를 나타낸다.

고 한다.

그 밖에 1954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한 「被납치자 명부」가 있으며, 여기에는 1만7940명의 이름이 실려 있다. 이 문서는 2002년 4월 정부 측이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에 제시한 문서이다. 그러나 자료가 마이크로 필름으로 되어 있고,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명하지 못해, 이번 拉北者들의 人的분석 자료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른 문서에 중복되어 기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拉北者 중 40%가 서울 등 수도 권출신

앞에서 살펴본 공보처 통계국 작성 「6·25 사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대한민국 정부 발행 「6·25 사변 被拉致者 명부」(8만2959명), 海公 申翼熙

(표 3) 拉北者 1000명 이상의 대량 납북지역

해당 市·道	해당 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종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원도	강릉군, 삼척군, 원주군, 평창군, 홍천군
경기도	인천시, 김포군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북도	정읍군
충청남도	공주군, 논산군, 예산군
충청북도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 충주군

(표 4) 직업별 拉北者 수

(단위:명)											
구분	서울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도	합계
경찰	463	24	25	30	44	35	314	268	3		1,206
공무원	1,293	102	300	8	28	41	92	115	25		2,004
기술자	2,032	76	239	10	37	7	40	112	27	1	2,581
교수	98	1	8								107
교원	313	15	116	4	47	9	21	34	11		570
군인	221	9	42	17	8	20	50	86	2		455
노동자	2,059	460	777	3	26	30	139	79	62		3,635
농업	849	9,029	5,654	1,435	6,274	1,656	5,097	7,254	7,593	44	44,885
변호사	129	1				1	1	3	3	1	139
상업	3,297	258	297	51	89	37	103	287	33		4,452
어업		202		11	183	4	1	2			403
의사	170	3	21		4		3	7	1		209
학생	2,043	203	345	18	211	41	168	205	162		3,396
회사원	1,600	61	78	4	4	4	10	25	7		1,793
기타 및 무직	9,901	382	1,229	109	177	1,547	875	1,325	350	1	15,896
합계	24,468	10,826	9,131	1,700	7,133	3,432	6,916	9,802	8,277	46	81,731

선생 유품에서 나온 「6·25 사변

피랍인사 명부」(2316명), 1956

년 대한적십자사의 「失鄉私民 등

록자 명부」(7034명) 등 네 개 문

서에 등재된 명단을 토대로 6·

25 납북자들의 人的구성을 분석

해 보기로 하자.

(표 5) 납북된 외국인 현황

① 연령별

11~20	21~30	31~40	41~50	51~60	61세 이상
2	6	3	4	4	1

② 직업별

공무원	농업	기사	상업	종교	미상	무직
2	7	1	1	6	2	1

③ 지역별

서울	경기도	경남도	경북도	전라도	전북도	충청도
1	2	5	3	1	2	4

실제로 동일인이 여러 문서에 등재된 경우도 있어, 人的구성 분석을 하기 전에 동일인은 하나의 문서에만 남겨두고, 다른 문서에서는 삭제하였다. 그 결과 네 개 문서에 등재된 9만4717명 가운데 8만173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6·25 전쟁 당시 정부는 拉北者の 수는 8만4532명이라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1955년 9월8일 대한적십자사 측은 국제적십자사 측에 1952년 캐나다에서 가결 채택된 가결사항 제20조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근거를 두어 拉北인사와 未송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대한적십자사 측이 제시한 拉北인사의 수는 1만7500명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모두 8만1731명이 납북되었으며, 이 가운데는 1524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공란은 性別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데이터로, 여기에도 여성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자들도 많은 수가 拉北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분석해 보면 拉北인사 가운데 약 4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는 인구 수에 비하

여 拉北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백두대간의 줄기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의 연령대별·지역별 拉北者 수를 살펴보면, 150여 명의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납북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납북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嬰兒(영아)들도 상당수가 있어, 어머니와 함께 등에 업혀 납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은 전국의 市·郡·區 단위에서 1000명 이상이 拉北된 지역을 나타낸 표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지역에 걸쳐 많은 인사들이 拉北되었다. 강원도는 5개 郡이 포함되어, 대량 拉北의 피해지역임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 수도권에 살던 지식인들이 주로 납북돼

拉北者들의 직업별 분류를 살펴보면, 여러 직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는 경찰, 공무원, 군인, 변호사, 검찰 간부,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拉北者 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이 통계자료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던 지식인 계층이 주로 拉北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자료분석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拉北者 가운데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拉北 외국인들은 모두 20명으로 남자 19명, 여자 1명이다. 이들의 국적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며, 이들의 연령별·직업별·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拉北 외국인들의 직업은 성직자들이 많았으며, 일부 농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6·25 납북자 명부 발견 이후…

6·25 전쟁 피랍자 가족들 이야기



『남편의 남북으로 막막해져 고아원 앞에 아이를 버렸습니다』

金成東 月刊朝鮮 기자

『부친 소식을 직접 들은 듯한 기분』

月刊朝鮮 2002년 2월호에 「발굴 특종-국가 작성 6·25 남북자 8만 명 명부 발견」題下(제하) 기사가 보도된 직후 기자는 6·25 전쟁 남북자 가족들로부터 여러 통의 이메일과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6·25 전쟁 남북자 가족들은 60代에서 70代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남북된 부모나 형제들의 생사확인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였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기업 사장으로 있다가 정년 퇴직한 후 서울 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車炯東(차형동)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남북자 가족들의 공통적인 생각과 바람이 들어 있다.

〈前略〉 제 부친의 성함은 車潤弘(차윤홍)입니다. 6·25 전쟁 때 남북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로 부친의 생사를 알아보려 노력했으나, 오늘까지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제 부친은 1904년생이십니다. 우리나라 헌법제정 기초전문위원을 하셨고, 초대 국회 의사국장, 상공부 상역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직 생존해 계실 가망은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모든 것을 잊어버

리고 지낼 수는 없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일단 명부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 부친의 소식을 직접 들은 듯한 기분입니다. (後略)〉

남북자 가족들은 남북된 부모나 형제가 생존해 있다는 소식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남북자 명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북된 가족의 소식을 들은 것 같다」며 기뻐했다. 명부에 찾고 있는 가족의 이름이 들어 있는 남북자 가족의 경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북된 부모와 형제들의 소식에 목말라 했던 것이다.

6·25 전쟁 남북자 가족들은 「북한이 납치해 갔다는 사실이 정부 작성 문서로 밝혀졌으므로 정부는 북한에 공식적으로 6·25 전쟁 중 남북 인사들에 대해 송환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송환을 요구해야 그들의 최소한의 소망인 남북된 부모와 형제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여순반란 사건 사진전사회 열었다고 납치

이회철(61)씨는 아버지 李東浩(이동호·1914년생)씨가 납북됐다. 月刊朝鮮 2002년 2월호에 공개된 공보처 통계국 작성 「서울특별시 被害者名簿」 10쪽에 납치로 기록돼 있다. 나이는 37세, 납치일은 7월 30일, 납치장소는 명동 2가 40번지, 직업은 사진재료상으로 돼 있다.

李씨의 아버지는 「사진문화」라는 잡지의 발행인이었다. 사진을 직접 찍기도 하고 잡지도 발행하는 한편 사진재료도 취급을 했다. 李씨는 아버지가 남북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 여순반

란 사건 사진전도 있었는데 그게 밉보였던 것 같습니다. 반란군들의 잔악상을 찍은 사진들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납북된 이후 李씨는 1952년에 어머니(홍성희)마저 잃었다. 李씨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끄집어내기조차 싫다.」는 말로 과거의 겪은 일 모두를 설명했다.

남북자 가족들은 가장인 아버지가 납치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희철씨와 마찬가지로 전태희(60)씨도 아버지가 납북됐다. 田씨의 아버지 田鳳彬(전봉빈·1908년생)씨는 남북 前 국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다. 자택에서 보안서원 두 명과 인민군 장교 두 명 등에 의해 납치됐다. 田씨는 아버지가 피랍 도중에 처형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남북 인사들이 평북 강계에 끌려가 있을 때 부근에 국군포로들도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2代 국회에 경북 영주에서 출마했었는데 영주 출신 국군 포로 중 한 명이 아버지를 알아보았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포로교환 후 우리집에 찾아와서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 주었답니다.』

그 이후로 田씨는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살아 계시리라는 기대도 접은 지 오래다.

『어느 정권도 6·25 납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순서상 남북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전향 장기수들은 조건 없이 보내 주면서 왜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송환 요구는 못 하는 겁니까.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한 가족들이 애를 끓이며 가족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그 이상 애가 끓었을 겁니다. 그들은 생사여부나 알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몰랐던 것 아닙니까.』

金智慧(김지혜·60)씨도 아버지 金占碩(김점석·1913년생)씨가 남북했다. 金占碩씨의 남북 당시 직업은 변호사였다. 광복 후 서울지검 부장 검사로서 송진우 암살사건, 여운형 암살사건 등을 담당했다. 1949년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 「피해자 名簿」에는 연령 48세, 직업 변호사, 소속 및 직위 대한변호사회 총무, 피해종류 납치 등으로 기록돼 있다.

1950년 7월8일 北으로 납치됐다. 1951년 1·4 후퇴 직전 평북 만포 진에서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아버지와 관련된 최근의 소식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으로 확신하는 金健雄(김건웅·60)씨의 소원은 아버지 金相烈(김상열·1908년생)씨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남북 당시 金相烈씨의 직업은 서울대학교 학무과장이다.

『1950년 9월22일 밤 12경에 인민군과 청년들이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아버지(金相烈)를 납치해 갔습니다. 당시 國大案(국대안)을 반대하던 좌익 학생들에 의해 납치된 것 같습니다.』

金씨는 「연좌제를 통해 정부가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을 감시한 것은 남북 대치라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이해가 간다.」면서도, 「남북인사를 월북인사 수준에서 관리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남한의 엘리트들은 다 잡아간 것 같다.」면서 「명부 발견을 계기로 정부는 떳떳하게 북한에 대해 6·25 납북자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最永(이최영·68)씨네 가족의 바람은 납북된 아버지 李鍵(이건·1897년생) 목사의 유해 송환이다. 李鍵 목사의 납북 당시 직업은 서울

신학교(現 서울신학대학교) 교장이었다.

李씨는 「북한이 우리들의 부모와 형제를 납치해 간 것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테러」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 납북인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아원 앞에 아들 버리고 통곡도

金玉粉(김옥분·74)씨는 남편이 납북된 경우다. 金씨의 남편 權慶品(권경정·1920년생)씨는 마포형무소 간수부장으로 있다가 납북됐다. 마포 형무소 부근 친구 집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잡혀간 이를 후 탈출에 성공했으나, 탈출한 다음날 다시 납치당했다.

남편이 납북된 후 정부에서 남편 대신 여자 간수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만삭의 몸이라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납북으로 살길이 막막해진 저는 이를 악물고 고아원 앞에 아이를 버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울어대어서 부둥켜안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金씨는 고향인 경북 봉화에서 행상과 포목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서후식(68)씨와 서정식(67)씨는 사촌 간이다. 두 사람 다 아버지가 납북됐다. 형제가 납북된 것이다. 후식씨의 아버지는 徐承杓(서승표·1905년생)씨로 경성제대를 나와 광복 전에는 평북 운산 군수, 강계 군수 등을 지냈다. 광복 후에는 대한중석 총무이사로 있다가 정치보위부 원에 의해 납치됐다. 사촌 동생인 정식씨의 아버지 徐承根(서승근·1907년생)씨는 東京大 상대를 졸업한 후 대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으로 있다가 납북됐다.

정식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몰라 아버지의 생일을 제삿날로 삼고 있다」면서 「인간의 도리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게 진정한 햅별정책」이라고 말했다.

#### 『정부 상대 소송 내겠다』

부부가 납북된 경우도 있었다.

李憲(이현·본명 이상규·1892년생), 黃基成(황기성·1902년생) 부부가 그들이다. 李憲씨는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한민당 결성에 참여해 정치활동을 하다가 납북됐고, 부인 黃씨는 당시 「婦人(부인)」 잡지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대한부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납치됐다. 당시 납북했던 玄相允(현상윤) 고려대 총장이 자신의 명함에 대학(고려대)을 중도에 그만두고 전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제자 李哲承(이철승)씨를 위한 응원연설을 부탁하는 글을 적어 보냈을 정도로 黃씨의 지명도는 높았던 것 같다. 두 사람은 피해자 名簿에 납치로 기록돼 있다.

玄相允 총장이 黄씨에게 보낸 명함 메모를 갖고 직접 찾아온 李憲씨의 손자 李武憲(이무현·60)씨는 「부친(李釋文·이석문·1995년 사망)의 유언이 할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지정토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번에 납북과 월북을 가려 주는 문서 덕분에 독립유공자 지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지방 검찰청 부장 검사로 있다가 피랍된 李柱臣(이주신·1910년생)씨의 3남 이경찬(63)씨는 「정부에 대해 6·25 납북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었다」면서 「정부가 작성한 납북자 명단이 그 증거이므로 자료가 완비되는 대로 그동안 책임을 방기한 정부에 대

한 책임을 묻는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자 名簿가 공개된 후 「6·25 전쟁 남북자 가족협의회」(회장·李  
美一)는 2002년 1월31일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6·25 전쟁 남북자들  
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조사와 이들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6·25 전쟁 남북자 가족협의회」는 이와 함께 6·25  
남북자 문제를 다룰 특별전담기구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입장  
을 물었다.

2002년 2월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일부의 관계자는 「6·25 전쟁  
남북인사가족협의회의 공개질의서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